

건설동향브리핑

CERIK

제878호
2022. 10. 24

정책동향

- 부동산 PF대출 부실 우려 확산, 다각적 대응 시급
- '젊고', '유능한' 건설 기술인력 양성 전략

시장동향

- 기준금리 0.5%p 증가 시 건설투자 0.14~0.26%p 감소

산업정보

- 2022년 상반기 건설업 산업재해 현황

건설논단

- 위기의 건설산업, 해법은 본립도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부동산 PF대출 부실 우려 확산, 다각적 대응 시급

- 한계상황에 도달한 가계부채 고려, 부동산PF 부실이 경제 전반 위기로 전이될 수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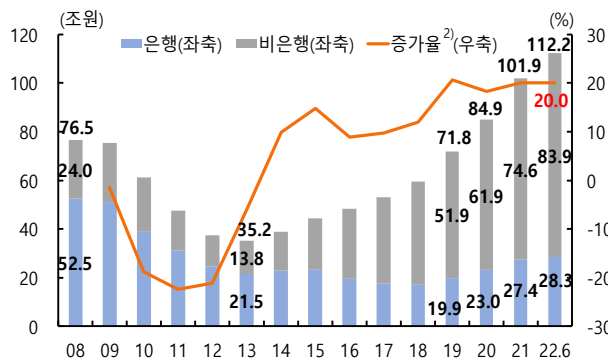
■ 지난 7년간 부동산PF대출 규모 가파르게 증가

- 부동산PF란 부동산개발사업의 수익성을 담보로 이뤄지는 대출을 말함. 국내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개발사업의 사업비 조달방식으로 부동산 PF가 처음 등장하였음.
- 부동산경기 호황기에 시중 유동자금이 개발사업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부동산 PF가 주기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 옴.
- 2000년대 중반 부동산 경기 호황기에 크게 늘었던 부동산 PF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크게 위축됨. 2014년 이후 부동산 경기가 개선되면서 2013년 말 35.2조원에 불과했던 부동산 PF대출 잔액은 2022년 6월 말 기준 112.2조원¹⁾으로 빠르게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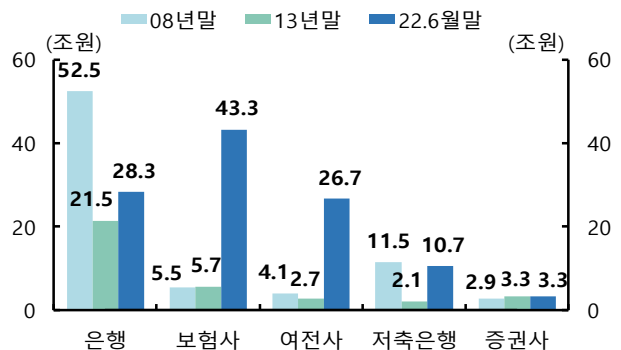
■ 부동산 PF대출 부실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최근 크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

- 최근까지 이어진 부동산 경기 호조 흐름 속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규제가 적용된 2금융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PF 취급이 크게 증가한 상태임.
-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거치면서 상대적으로 강한 규제를 받아온 은행권의 부동산 PF 취급 규모는 크게 증가하지 않은 반면, 저금리 기조 하에서 제2금융권에 속한 금융기관들이 대체수익원의 하나로 부동산 PF대출을 크게 확대해 온 것으로 확인됨.

<그림 1> PF대출 잔액¹⁾ 추이



<그림 2> 업권별 PF대출 잔액



주 : 1) 은행, 보험사, 여전사, 저축은행, 증권사 합계 ; 2) 전년 동기 대비.

자료 : 한국은행(2022.9.22), 「금융안정 상황(2022년 9월)」, 보도자료에서 인용.

1) 은행, 보험사, 여전사, 저축은행, 증권사가 취급한 부동산 PF 총계임.

- 그런데 금년 초부터 미국 금리인상, 원자재가격 상승, 분양시장 냉각 등으로 개발사업 여건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부동산 PF대출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음.
- 특히 2금융권의 경우 사업인허가 이전 단계에서 실행된 뒤, '본PF'를 통해 상환되는 '브릿지론'의 취급 비중이 큰데, 금년 하반기 이후 전 금융권에서 본PF 실행이 거의 중단되면서, 브릿지론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큰 상태임.

■ 부동산 PF대출이 부실화할 경우 국내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듯

- 부동산 PF대출 부실은 대출 취급 금융기관들의 직접적인 재무건전성 악화뿐만 아니라, 부동산 PF대출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유동화증권과 채무보증 등 파생금융상품들의 동반 부실이 초래되어 자본시장 전반에 작지 않은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음.²⁾
- 특히 이미 한계상황에 도달해 있는 가계부채 문제를 고려하면, 부동산 PF대출 부실이 부동산 가격 하락과 그에 따른 가계부실 문제로 전이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³⁾

■ 부동산 PF대출 부실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

- 전 정부에서 추진해 온 과도한 부동산 규제가 부동산 PF대출 부실 위험을 높이고 있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임. 따라서 과감한 규제 개선이 이뤄져야 함.
 - 과도한 세 부담과 금리인상에 따른 가격상승 기대심리 악화로 부동산 가격 급락 가능성이 예견되고 있음. 따라서 기존 부동산 규제에 대한 신속한 완화가 이뤄져야 함.
- 사업장별 대출 부실가능성 진단과 선별적 금융지원 방안이 수립돼야 함.
 - 2019년부터 시작된 금융감독당국의 부동산 PF대출에 대한 규제강화가 최근 더욱 강화됨으로써 정상 추진이 가능한 사업들에 대해서도 PF 공급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음. 범 정부 차원에서 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정책금융기관을 활용해 신용보강을 제공함으로써 금융사들의 금융지원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 부실화된 자산의 조기 인수와 처리를 위한 기금의 조성 및 활용이 필요함.
 - 부동산 PF사업 관련 민간·정책금융기관의 공동출자를 통해 기금을 조성한 뒤, 부실채권을 신속히 인수처리함으로써 부동산 PF의 부실에 따른 부정적 효과가 금융시장과 경제 전반으로 파급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함.

김정주(연구위원 · kjj@cerik.re.kr)

2) 한겨레(2022. 10. 3.), “[사설] 커지는 ‘부동산PF 부실화’ 위험, 정부 경각심 가져야” 참고.

3) 중앙오피니언(2022. 5. 3.), “한국 실질 가계부채 2713조원, GDP 대비 130%” 참고.

‘젊고’, ‘유능한’ 건설 기술인력 양성 전략

- 해외 인력 적극 활용, 디지털 전환 가속, 기술자격과 기업 내 성장 경로 단축 -

■ 건설 기술인력 등록 감소, 20~30대 유출 인력도 상당한 수준⁴⁾

- 지난 20년(2001~2021)간 건설 기술인력(기능인력 제외)의 세대별 구조는 우리 산업의 미래에 많은 고민을 주고 있음.
 - 건설기술인협회 등록기술자를 기준으로 지난 20년간 30대 이하 기술자 등록은 20년간 1/3수준으로 줄었고, 51~70세, 71세 이상 기술자의 수는 10배 이상 증가함.
- 이미 건설업에 진입한 20~30대 기술자의 유출도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⁵⁾
 - 전통적인 건설기술업체들은 3D업종이라는 인식이 강하여 신규 채용이 어렵고, 소수 인력의 스타트업들의 핵심 엔지니어들은 처우가 좋은 대형 건설사로 이직하고 있음.
 - 또한, 대형 건설사에 진입한 20~30대 기술인력 역시 인력 유출 현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MZ세대로 대표되는 젊은 세대는 건설기업 내에서 성장 코스의 필수적인 현장 및 지방 근무를 크게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건설업의 사고사망자 수는 전산업에서 가장 높은 실정으로 비록 기술인력 혹은 관리자라 하더라도 현장 출근 시 사고 사망률이 높은 산업을 선호하지는 않는 것은 당연한 선택일 것임.
 - 더욱이 상대적으로 처우와 근무환경이 열악한 중소건설업체에서는 이러한 인력난의 문제는 훨씬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음.

■ 건설 기술인력 육성 및 양성 전략과 세부 내용의 전향적인 변화 필요

- (국가 전략과 연계) 대한민국 국적의 대졸자를 중심으로 한 인재 유입 및 양성 전략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타 산업 및 국적의 기술인력 유입 전략을 검토해야 함.
 - 이민 기술자 혹은 해외 기술자 유입을 위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로드맵과 정부 부처의 협력적 대처가 요구됨.⁶⁾

4) 본고는 앞서 발간한 『건설동향브리핑』 874호 ‘신규 인력 부족·고령화… 건설 기술인력 대책 마련 시급’에 이은 건설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전략을 담은 원고임.

5) e대한경제 2022년 7월 22일 기사(콘테크도 인력난 가중)에서는 “경력자는 대기업 이직을 희망하고, 젊은 기술자는 건설기술 분야에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있어 기업 경영과 각종 노력에 차질…” 등 대중소 건설기업, 스타트업 등의 기술인력 수급 및 유지 실태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록함.

- 아직까지는 국가 차원의 이민 정책의 변화는 단순히 건설산업만의 문제 해결 차원에서 접근되어서는 안 되며, 사회의 다양한 찬반 논란이 있는 실정임. 하지만, 국가와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육성형 이민정책⁷⁾의 구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됨.
- 참고로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반도체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영국은 ‘특별비자’를 도입하려 하고 있고, 대만은 자국의 인력양성 정책과 함께 신흥국 인력을 유치하는 정책을 구사함.⁸⁾
- (기술인력 성장 경로의 단축 및 효율화) 건설 기술인력의 법적 성장 경로(초급기술자~특급 기술자)와 기업의 성장 경로의 재검토 및 효율화(단축) 필요
 - 정보통신, 엔터테인먼트 등의 분야 혹은 스타트업 기업과 비교할 때 현재 건설산업의 기술인력 성장 경로는 너무 길며, 과거보다 빠른 성장을 원하는 젊은 인재로부터 매력적이지 못하다고 평가되고 있음.
 - 건설회사에 입사하여 임원으로 성장하는 소요기간은 보통 20년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타 산업의 성장 경로보다 장기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 참고로 국가건설자격의 경우 학사학위와 기사 자격 보유를 전제로 특급 기술자가 되기 위한 최단 경로는 10년이며, 산업기사의 경우 26년이 소요됨. 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40년이 걸림. 단, 기사 자격을 가지지 못한 경우, 특급 기술자가 될 수 있는 경로는 없는 실정임.
- (건설산업의 스마트화와 디지털화) 현장 생산뿐만 아니라 현장관리와 본사관리 등 다양한 기술 및 관리 영역의 생산성을 혁신할 수 있는 전략 마련과 투자가 필요
 - ‘탈현장’ 관련 기술은 건설 현장 기능인력의 수요를 줄이거나 생산 위치를 현장에서 공장으로 전환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며, 전통적인 현장 관리의 수요 자체도 줄일 수 있음.
 - ‘디지털 전환’은 건설 생산 프로세스의 혁신과 함께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각종 경영 및 관리 프로세스의 혁신과 낭비제거가 필요하며, 디지털 기반의 건설기업 및 사업관리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함.
- (새로운 인력 운영 프로그램의 구축) 해외 기술인력 및 기존 인력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기업 차원의 인력 운영 프로그램의 혁신이 요구됨.
 - 스마트 및 디지털 전환 교육 등 새로운 변화와 기술에 대한 기존 인력의 교육 및 직무변화에 대한 기업 차원의 투자와 노력이 필요함.
 - 또한, 건설기업은 해외 기술자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인력 관리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해외 국가(미국 등)와 기업에 대한 벤치마킹이 수반되어야 함.

최석인(선임연구위원 · sichoi@cerik.re.kr)

6) 금번 정부 역시 아직은 논의 단계이지만 이민청 설립 등 그동안의 정책기조와 달리 이민 정책의 변화를 조금씩 예고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현재 인구 감소로 근로인력의 절대적 부족과 기술인력 등 대졸 인력의 출림 현상 등으로 건설산업과 같은 전통 산업에서의 기술인력 부족 현상은 상당한 기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7) 세계일보 2022년 10월 5일 자 기사(정부 조직개편에 이민청 포함될까... 새로운 이민정책 필요)

8) 서울경제 2022년 8월 7일 자 기사(팍스 테크니카, 인재에 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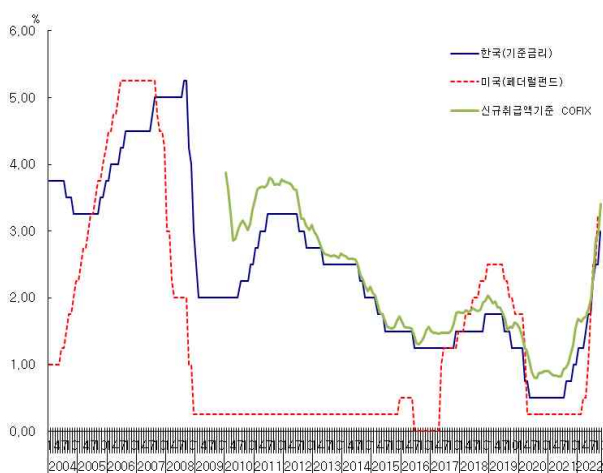
기준금리 0.5%p 증가 시 건설투자 0.14~0.26%p 감소

- 시장 혼란 불가피, 내년 건설투자에도 마이너스(-) 영향 미칠 전망 -

연초 1.0%에서 6번 인상, 기준금리 10월에 3.0%로 급격히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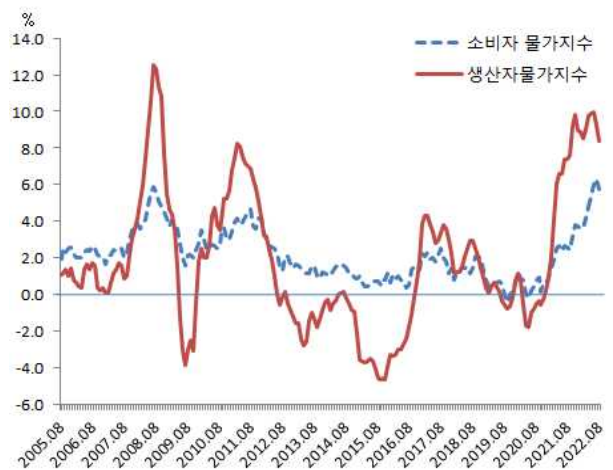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0월 12일 기준금리를 0.5%p 인상함(<그림 1> 참조).
- 1월, 4월, 5월, 7월과 8월에 이어 10월까지 총 여섯 차례 인상해, 연초 1.0%였던 기준금리는 10월에 3배 수준인 3.0%로, 2012년 10월 이후 10년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섬.
 - 1년도 안 되어 기준금리가 2%p 상승한 것은 통계가 제공된 지난 1999년 5월 이후 처음임. (종전에 2005년 9월 3.25%에서 2008년 8월 5.25%로 2%p 상승하는 데 대략 3년 정도 걸림)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린 배경에는 국내 물가 상승률이 매우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으로 향후 추가 금리인상이 또한 예상됨(<그림 2> 참조).
 -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 6월 6.0%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1998년 11월 6.8% 상승한 이후 2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함.
 - 비록 6월부터 9월까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0%에서 5.6%로 소폭 하락하였지만, 여전히 물가 안전목표인 2%보다 높은 수준임.

<그림 1> 기준 금리 추이



자료 : 한국 은행, FEB, 전국은행연합회.

<그림 2> 국내 물가 상승률 추이



주 :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추이임.
자료 : 통계청.

■ 금리 상승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건설투자에도 마이너스(-) 영향 미칠 전망

- 시장금리가 상승할 경우 비용 압박에 공사가 일부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지만, 최근과 같이 단기간에 금리가 급등할 경우에는 신용경색이 발생해 시장에 혼란이 커질 수 있음.
 - 급등한 자재가격, 조달 금리 상승 등 변동성 커져 미래 투자 예측이 어려운 상황임.
 - PF대출이 급격히 위축되고 기업들의 신사업 신규 대출도 또한 감소할 것으로 보임.
- 기준금리가 0.5%p 증가 시, 건설투자는 1차 년도에 대략 0.14%p~0.26%p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됨.⁹⁾

<표 1> 각 기관 건설투자 증감률(%) 전망치

구분	2022년			2023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연간
KDI (05.18)	-3.0	0.3	-1.3	2.3
한국은행 (05.26)	-3.4	2.2	-0.5	2.2
한국건설산업연구원 (06.27)	-4.0	0.2	-1.8	-
2/4분기 국민소득 발표 (09.01)	-4.5	-	-	-
NABO (10.5)	-4.5	-1.4	-2.9	0.4

주 : NABO 상하반기는 연간 수치에서 역산. 자료 : 각기관.

- 한국은행 조사 결과, 상업용 건물 투자가 공업용보다 금리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금리상승 파급효과를 비교한 결과 공급자도 영향을 받지만, 수요자측 위축이 더욱 심화될 전망으로 주택거래와 청약이 위축되어 주택 미분양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올해 순차적으로 인상된 기준금리는 내년 건설투자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과도한 투자심리 위축 배제하고, 주택 및 건설 공급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 올 상반기에 대부분 기관들이 내년 건설투자가 2%대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였지만, 예상치 못한 급격한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0~1%대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 10월 NABO에서 발표한 자료를 살핀 결과 내년 건설투자 성장률을 0.4%로 전망하였는데 최근 상승한 금리 영향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판단됨.
- 변동성이 커진 시기 가장 큰 문제는 불확실성에 따른 공포와 불안 그 자체로, 과도한 투자 위축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규제 완화를 서두를 필요가 있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주택 및 건설 공급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살필 필요가 있음.
 - 고물가 상황에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쓸 수 없기에 정부가 당장에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규제완화와 세금 감면 등 소극적일 수밖에 없음. 다만, 정부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뚜렷한 공급 방향에 대한 계획을 순차적으로 실행하고 일관적인 방향을 제시해 시장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박철한(연구위원-igata99@cerik.re.kr)

9) '대외 환경 및 정책 변화의 건설산업 파급효과 분석' (박철한 외 2015. 05)과 '한국은행 금리 상승의 내수 부문별 영향 점검' (2022. 07)자료를 통해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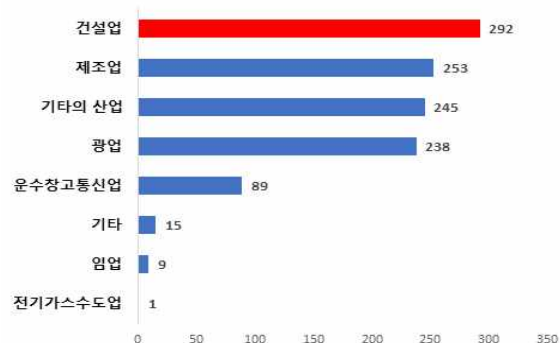
2022년 상반기 건설업 산업재해 현황

- 전년 동기 대비 5.2% 감소한 292명,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19명 사망자 발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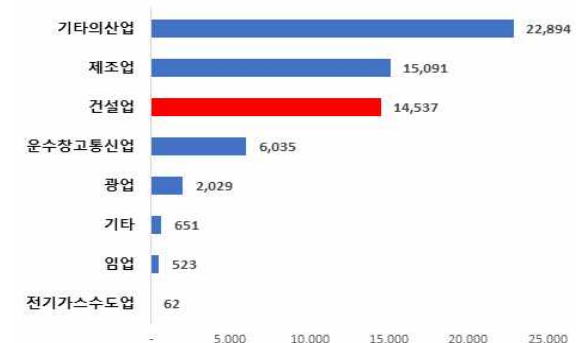
■ 2022년 상반기 건설업 사망자 292명, 전체 산업의 25.6%¹⁰⁾

- 2022년 상반기 국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1,142명이며,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292명으로 전체의 25.6%를 차지함.
 - (전체 산업) 사망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5명(0.4%) 증가하였으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85명의 사망자(41.5%)가 발생함.
 - (건설업) 전년 동기 대비 16명(5.2%) 감소하였으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19명의 사망자(전체 5인 미만 사업장의 64.3%)가 발생함.
- 일반 재해자의 경우, 동기간 전체 산업에서 6만 1,822명이 발생하였으며, 건설업은 1만 4,537명으로 전체의 23.5%를 차지함.
 - (전체 산업) 재해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3,152명(5.4%) 증가하였으며, 특히 질병재해자 수가 16.5% 증가함(사고재해자 수 3.2% 증가).
 - (건설업) 전년 동기 대비 941명(6.4%) 증가하였음. 재해자 수는 제조업(2.4% 감소)을 제외한 모든 사업에서 증가함.
 - 최근 국내 재해자 수 증가 추세는 산재은폐 처벌 강화('18.10.), 산재승인 절차 간소화('19.01.),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기준 변경('19.01.)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됨.

<그림1> 2022년 상반기 산업별 사망자 수



<그림2> 2022년 상반기 산업별 재해자 수



주 : 기타의 산업 - 도·소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음식·숙박업 등이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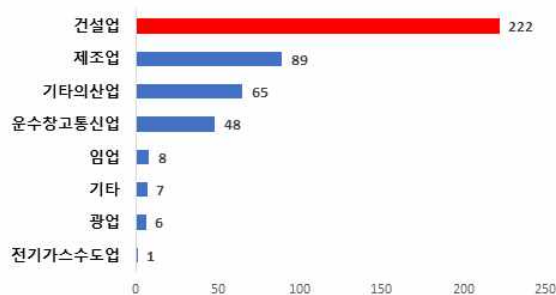
10) 고용노동부의 '2022. 6월 말 산업재해현황'의 주요 내용을 요약함.

■ 건설업 사고사망자 222명(전체 산업의 49.8%), 전년 동기 대비 18명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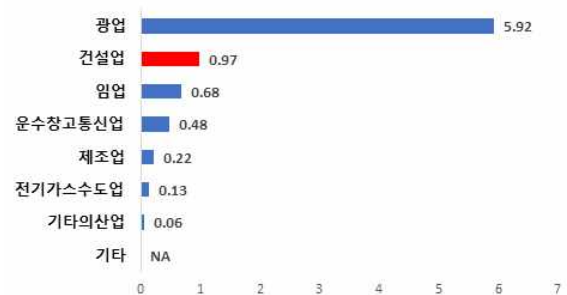
● 2022년 상반기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222명으로 전체 산업 446명의 49.8%를 차지함.

- 국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로 구분할 수 있으며, 건설업은 타 산업과 달리 사고사망자 비율(76.0%)이 매우 높은 특징을 가짐.
- (전체 산업) 사고사망자 수는 44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명 감소하였으며, 근로자 만명당 사고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사고사망만인율도 0.25‰에서 0.23‰으로 감소하였음.
- (건설업) 전년 동기 대비 사고사망자 수가 18명 감소(240명 → 222명)하였으며, 사고사망만인율도 1.09‰에서 0.97‰로 감소하였음.

<그림3> 2022년 상반기 산업별 사고사망자 수



<그림4> 2022년 상반기 산업별 사고사망만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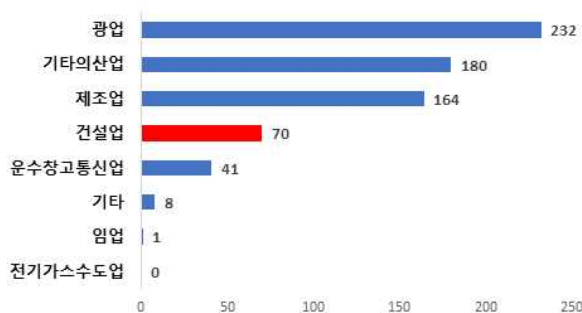


■ 건설업 질병사망자 70명(전체 산업의 10.1%), 전년 동기 대비 2명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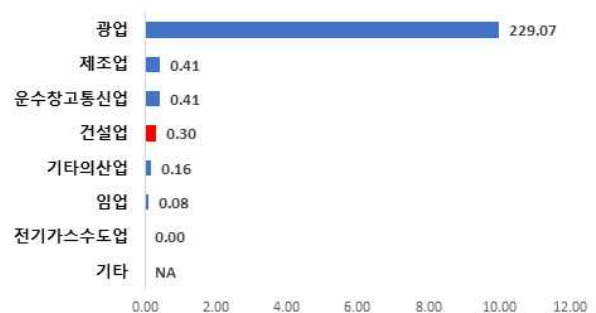
● 2022년 상반기 건설업 질병사망자는 70명으로 전체 산업 696명의 10.1%를 차지함.

- (전체 산업) 질병사망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33명 증가(663명 → 696명)하였으며, 근로자 만명당 질병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질병사망만인율은 0.35‰로 동일함.
- (건설업) 전년 동기 대비 질병사망자 수가 2명 증가(68명 → 70명)하였으나, 질병사망만인율은 0.31‰에서 0.30‰로 약간 감소하였음.

<그림3> 2022년 상반기 산업별 질병사망자 수



<그림4> 2022년 상반기 산업별 질병사망만인율



최수영(연구위원 · sooyoung.choe@cerik.re.kr)

위기의 건설산업, 해법은 본립도생

지난 1958년 건설업법이 제정된 이후 우리 건설산업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해오고 있다.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도로, 철도, 항만 등의 사회기반시설과 함께 주택, 오피스 등 생활 관련 시설들을 구축하며 산업 활성화와 국민 삶의 질 개선의 기틀을 다져왔다.

이뿐만이 아니다. 저성장에 빠진 우리 경제에 건설산업은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건설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에 이르고, 2021년 기준 전 산업 취업자의 7.7%에 달하는 고용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 경제 기여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 건설산업은 여전히 빨간불이 켜진 위기 상황이라 볼 수 있다. 수십 년 동안 고질적 병폐로 지적된 바와 같이 건설산업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업계 흥망이 결정되는 천수답형 산업구조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전형적 규제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안전사고 발생 1위의 불명예가 계속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디지털화의 전환이 다른 산업보다 뒤처지고 생산성도 최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신규 청년 인력 유입 감소에 따른 고령화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에는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의 차질, 원자재 가격 상승, 경기 둔화 등 산업 지속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정부와 산업계, 학계 및 연구계 등 모든 관련 종사자들이 우리 건설산업의 위기와 문제를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잇따른 부실공사와 안전사고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단기적이고 임기응변식의 규제와 처벌 위주의 대책만을 양산하고 있다. 산업계는 자체적 개선 노력보다는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만연하다.

건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 내 존재하는 각종 위험 요인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망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로 우리 산업 또한 정밀진단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치료와 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올해는 건설산업과 건설기술 발전의 중장기 법정 계획인 건설산업기본계획과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을 새롭게 마련하는 시기다. 이번에 건설산업 전반을 진단하고 올바른 처방전을 마련하는 기회가 돼야 한다.

다만 과거와 같이 정부 주도의 하향식 정책 수립보다는 모든 산업계가 합심해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쟁력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거시적 목표에서 총의(總意)를 모아야 한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편협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해야 한다. 마침 현 정부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치는 민간 및 시장 주도 성장을 중시하고 있어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

또한, 각 산업 주체별로는 각자의 역할에서 산업의 성장을 도모할 주된 추진 방향 설정과 이에 대한 독심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 정부는 더 이상 건설산업을 규제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 육성의 관점에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산업계는 낮은 생산성과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부실 및 안전사고의 근본적 해소를 위한 자체 역량 강화와 선진 경영기법 도입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끝으로 학계와 연구계는 새로운 건설기술의 도입과 확산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논어 학이편에 보면 ‘본립도생(本立道生)’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이는 ‘기본(근본)이 서면 나아갈 길이 생긴다’는 당연한 이치를 뜻한다. 우리 건설산업도 각자 업역에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근본을 바로 세워, 진정한 국가경쟁력을 주도하고, 이끌어갈 중심 산업로서의 역할을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건설산업에 닥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기회로 만들어가는 지혜가 바로 여기에 있다. <아시아경제, 10.3>